중국 갑작스런 방역 완화에 우왕좌왕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 전환
전문가들 연일 백신 접종 강조
지방정부 완화 주저 주민들 혼란

중국이 연일 백신 접종을 강조하며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5일 명보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3년 가까이 감염자를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로 코로나' 원칙을 고수해온 중국이 정책의 방향을 틀기 시작한 가운데 전문가들의 관련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 방역 전문가인 장원훙 푸단대 부속 화산병원 감염내과 주임은 지난 3일 한 의학 포럼에서 백신 접종률 제고와 조기 약물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의 '닥터 파우치'로 불리는 그는 "백신 접종과 약물 치료를 통해 우리는 바이러스를 길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수 있다"며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전염병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했다.

장 주임은 중국이 더는 '감염 제로'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되며 증증이나 유증상자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전날 논평에서 "주요 집단의 예방 접종을 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민일보는 "고령자의 백신 접종률은 아직 중증 질환과 사망에 대한 장벽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썼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광저우, 구이저우, 간쑤 등 3개 지역 관리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내년 1월 말까지 80세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전체 인구의 백신 1차 접종률을 95%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 각 지방 정부에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또 현재 인구의 57%인 부스터 샷 접종률도 향후 두 달 내 9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중국 국무원 코로나19 합동 방역 통제기구가 '노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화에 관한 통지'를 통해 노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이후 당국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80세 이상 인구는 3600만 명이다. 현재 이들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6.6%, 3차 접종률은 40%에 머문다. 중국 전체 인구의 1차 백신 접종률은 90.2%이다.

아울러 지난 7월까지 4년여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주임을 맡았던 가오푸 중국과학원 원사는 "향후 전염병의 예방·통제 목표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질병을 제거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정부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SCMP는 "일부 정책 방향이 여전히 모순되는 상황에서 일부 도시들은 여전히 통제 정책의 완화를 주저하고 있다"며 "베이징시의 경우 지난 며칠간 주민들은 혼란과 혼돈을 토로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시가 병원과 대중교통에서는 PCR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사무실이나 쇼핑몰에 들어갈 때는 필요한데 검사소의 수가 갑자기 대폭 줄어 불편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감염자 수가 줄어든 것은 검사소 수가 감소한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명보는 "인터넷에는 이러한 상황을 풍자한 애니메이션도 올라왔다"며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PCR 검사가 필요 없다며 잠시 기뻐했지만, 곧 여전히 PCR 검사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 검사소를 찾았으나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화를 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검사소가 없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PCR 검사소 앞에 길게 줄을 선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고 있고 사람들은 감기약과 해열제 사재기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자유광장에서 약 50여명이 중국 당국의 강력한 코로나19 방역정책인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며 백지 시위를 하고 있다. 중국 본토에서 백지 시위가 열린 지난달 말 이후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도 연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산타 달리기 준비하는 영국 리버풀 시민들 4일(현지시간) 영국 북서부 리버풀에서 산타클로스 의상을 입은 시민들이 연례 5㎞ 산타 달리기를 준비하고 있다. 리버풀을 연고로 하는 두 축구팀 리버풀 FC와 애버튼 중 애버튼 팬은 라이벌인 리버풀 상징색이 붉은색이어서 이에 반대되는 파란 의상을 착용하기도 한다. /연합뉴스

OPEC+, 하루 200만 배럴 감산 유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방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OPEC+는 4일(현지시간) 정례 장관급 회의 후 낸 성명에서 지난 회의에서 합의한 감산 정책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OPEC+는 성명에서 "향후 원유 시장을 관찰하면서 수급 균형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OPEC+는 정례 회의를 열고 11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줄이고 이를 내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었다.

현재 OPEC+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은 10월보다 200만 배럴 감소한 하루 4185만 배럴 수준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감산을 결정한 OPEC+는 당시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른 경제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견제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노력하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산유국들의 이 같은 결정을 비난했다.

이날 감산 방침 유지 결정에 바데르 알물라 쿠웨이트 에너지 장관은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결정이었다면서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치솟는 물가, 고금리가 석유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OPEC+ 정례 장관급 회의는 내년 6월 4일로 예정됐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OPEC+의 결정이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호주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을 배럴당 60달러(약 8만원)로 설정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OPEC+ 회의에서 몇몇 산유국 장관들이 러시아산 원유 상한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한국 260조원 투입하고도 저출산 극복 역부족인 이유는?

CNN "경제적 불안이 주요인"
"아이들 일생 지속 지원 중요"

역대 정부의 엄청난 자금 투입에도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CNN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이날 '한국은 2000억 달러(약 260조원)를 투입했지만 아이를 가지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베이비페어 시즌이 돌아왔지만, 그 산업은 축소되고 있고 고객도 줄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한국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을 거론하면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며 "이는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고 역시 출산율이 떨어진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연금체제를 지원하는 노동인력의 부족에 직면한 고령화 국가인 나라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및 더 큰 경제적 불안같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CNN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역대 정부가 해결할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전문가들은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CNN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 16년간 인구 증가를 위해 2000억 달러 이상 투자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현 정부는 문제를 위원회 구성과 신생아에 대한 더 많은 재정적 지원 약속 등 비슷한 경향을 지속하는 것 외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CNN은 "많은 전문가는 현재의 자금 투입 접근 방식이 너무 일차원적이라며, 대신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일생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에서 아기를 갖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기대되는 것"이라면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한 부모 가정에는 편견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은 체외수정(IVF)을 미혼 여성에게 제공하지 않고,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입양을 어렵게 하는 등 비전통적 관계의 커플이 차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러시아, 전쟁 중 우크라 정체성 파괴 행위

박물관·미술관 조직적 약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 국가 정체성 파괴를 위한 조직적 약탈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을 점령했을 당시 우크라이나의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 조직적인 약탈 행위를 벌였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그동안 우크라이나 문화 시설 200곳 이상이 파괴됐다. 특히 러시아 점령지에서는 우크라이나 국기 사용이 금지된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 언어로 된 책들이 학교 서고에서 사라지거나 버려졌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통 의상인 '비쉬반카'도 금지돼 시민들은 착용 시 구금될 수 있다는 위협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올렉산드르 트카첸코 우크라이나 문화부 장관은 자국 언어를 기념하는 날인 지난달 9일 "우리 문화와 언어가 최전방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헤르손 지역에서는 적잖은 유물과 미술품들이 러시아에 의해 반출됐으며 시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살해되는 등 문화 예술가들에 대한 탄압도 확인됐다.

반출품 중에는 헤르손시 성카테리나 성당에 보관돼 있던 러시아 장군 그리고리 포템킨의 유해도 있다. 18세기 예카테리나 여제 시절 장군인 포템킨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과거 러시아 제국의 영예를 되찾으려는 러시아 극우세력이 숭배하는 인물이다. /연합뉴스

신안동, 상업용지
-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10층, 72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3억

대인동, 상업용지
- 롯데백화점 부근
- 대지 15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9층, 64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0억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 중 17층
- 계 14평, 전 9평
- 무등산 방향
- 일조권 전망최상
- **사무실 전용**
- 매매 – 6100만원

덕남동, 임야
- 전대병원 부근
- **지분매매**, 20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 그린벨트, 도로접
- **개발호재 많음**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6천만원

상담 및 문의. 010 – 9582 – 7400